

● 2025-05-21 ●

율촌 입법 위클리

Yulchon Weekly Legislation Report

2025-08호 (2025년 5월 21일)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2025년 4월 28일(월)부터 5월 16일(금)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금융혁신법에 따라 샌드박스로 지정·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및 규정의 개정이 완료되고 국회 계류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까지 운영·검증된 자본시장 분야 혁신금융 서비스의 제도화가 모두 완료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 15일 은행, 저축은행, 신탁, 농협, 수협 등 모든 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플레이션과 금융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한편, 최근 통신사의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하여 통신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침해사고를 금지행위에 포함시켜 방통위가 원인조사 기간 등에 이용자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이용자의 해지 요청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동일 법률 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용자가 해당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 등 명칭에 제한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후보별 정책 소개 및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는 후보자별 10개 공약 및 선거공약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전체적인 입법 및 정책 동향은 본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위클리 포커스 [바로가기](#)

- Focus 1. 자본시장 분야 주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 추진
- Focus 2.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 세부 기준 마련
- Focus 3. 21대 대선 정책 관련 주요자료

II. [국회] 입법 동향 [바로가기](#)

- ① 본회의 의결 법안
- ② 신규발의 법률안
 - 기업 운영 지원 및 세제 혜택 관련 법안
 - 통신사 유심 해킹 관련 법안
 - IT 사업자 의무 관련 법안
 - 인공지능 산업 지원 관련 법안
 - 금융거래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안
 - 공정거래 관련 법안
 -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법안

III. [정부부처] 정책 및 입법 동향 [바로가기](#)

- [시행] 불합리한 하도급 유보금 약정, 「부당특약 고시」 및 「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
- [입법예고]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 -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 [입법예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 일부개정

IV. 주요 입법 정책 자료 [바로가기](#)

- 정부/공공기관 정책자료
- 정부/공공기관 연구보고서
- 주요 세미나 / 공청회 / 간담회

Focus 1. 자본시장 분야 주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 추진

- 금융위원회는 5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본 개정안은 금융혁신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조각투자(신탁 수익증권)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
- 본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후 9월 30일에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및 규정의 개정이 완료되고 국회 계류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까지 운영·검증된 자본시장 분야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가 모두 완료된다는 입장입니다.

1.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제도화

-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제도화를 위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장외거래중개업)를 신설합니다. 향후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요건 및 별도 인력요건 등 관련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일반종목과 전문종목을 구분하여 운영하며, 전문종목은 일반종목 대비 거래대상 지정 요건, 공시기준 등을 완화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전문종목은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제한되며 법상 전문투자자 및 VC·엔젤투자자 등 이에 준하는 투자자 간 거래가 원칙입니다.
- 발행-유통 분리 원칙에 따라,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을 본인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에서 중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금감원 사전승인 및 사후보고, 증권 발행인 및 특수관계인 거래 금지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중개할 수 있습니다.

2. 조각투자(신탁 수익증권) 유통플랫폼 제도화

-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역시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합니다. 인가요건, 업무기준, 불건전 영업행위, 매출공시 특례 등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유사하게 제도화될 예정입니다.
-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발행 기업의 재무·비재무 정보가 중요하지만 조각투자의 경우 투자대상이자 신탁재산인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탁업자(발행인)가 분기별 신탁재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합니다.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현황, 운용경과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신탁 관련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합니다.

3.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제도화

- 2022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도 함께 제도화합니다.
- 주식 소수단위 거래 방법은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 소수단위로 매매주문을 내면, 증권사가 부족한 소수단위를 자기분으로 채워 온주로 만들어 주식을 매수합니다. 이 온주를 예탁결제원에 신탁하면 예탁결제원은 실질적으로 소수단위 주식 역할을 하는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투자자에게 배분해주는 구조입니다.

관련자료

[보도자료] 자본시장 분야 주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 추진

[바로가기](#)

Focus 2.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 세부 기준 마련

- 금융위원회는 2025년 5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5월 1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된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의 주요사항은 2024년 12월 발표한 「회계 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지정유예 법적근거 및 유예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개정된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은 2025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1.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해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노력 등 5대 평가분야의 17개 평가항목에 따라 선정되며, 주기적 지정 유예의 효과로, 원칙적으로 6년 자율선임 + 3년 지정에서 우수기업은 9년 자율선임 + 3년 지정으로 변경 됩니다.

2.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에 대한 중복부담 완화

- 상장기업이 주기적 지정감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미 당국이 지정한 독립적 외부감사인인 감사중임에도 일률적으로 지정기간이 연장되고 감사인이 교체되어 불필요한 기업 부담이 발생했던 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주기적 지정기간 중에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감사인의 문제가 아니면서 회계부정과 관련이 적은 경우”에는 지정기간 연장이나 감사인 교체 없이 현재 지정감사인이 엄정 감사하도록 개선 되었습니다.
- 해당 사유에는 재무기준 미달, 대표이사 변경 횟수, 회사의 지정 기초자료 미제출 등 절차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단, 감리에 따른 제재조치 등 회계부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지정기간이 연장됩니다.

3. 감사인 지정점수 적용방식 개선

- 기존에는 자산 2조 원 이상 회사들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차감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회사들간에 감사위험, 감사투입 필요인력, 감사보수 등 차이가 있는데도 그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빅4 회계법인에 유리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입니다.
- 이번 개정으로 감사인 지정점수를 차감할 때 적용하는 가중치(규모별 가중치)를 감사보수 및 감사투입시간, 그간의 감사품질 개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차등화하였습니다.

관련자료

[보도자료]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의결

[바로가기](#)

Focus 3. 21대 대선 정책 관련 주요자료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바로가기](#)

01. [경제·산업]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02. [정치·사법]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03. [경제·산업]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04. [외교·통상]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05. [사법·행정·보건의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06. [행정·경제·산업] 세종 행정수도화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07. [교육·경제·복지]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08. [경제·복지]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09. [교육·복지]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10. [환경·산업]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10대 공약 [바로가기](#)

01. [재정·경제·복지·국방·통일·외교통상·산업자원·건설교통]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02. [재정·경제·복지·교육·인적자원·산업자원·건설교통·과학기술·정보통신]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03. [재정·경제·복지·교육·인적자원·산업자원·건설교통]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04. [재정·경제·복지·산업자원·건설교통]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05. [재정·경제·복지·산업자원·건설교통]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06. [재정·경제·복지·교육·인적자원·보건의료·환경·산업자원·건설교통]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07. [재정·경제·복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08. [정치·행정·사법·보건의료·환경]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09. [정치·행정·사법·국방·통일·외교통상]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10. [국방·통일·외교통상]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10대 공약 [바로가기](#)

01. [행정]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02. [산업자원]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03. [조세 지방자치]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04. [경제 지방자치]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05. [사회복지]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06. [교육]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07. [사회적 경제] 5천만 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08. [국방]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09. [산업자원규제혁신]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실시
10. [과학기술 연구환경]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권영국 후보 (민주노동당) 10대 공약 [바로가기](#)

01. [재정·경제·복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02. [기타(노동)·재정·경제·복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03. [재정·경제·복지]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04. [교육·인적자원·기타(사회안전)]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05. [보건의료·환경] 기후정의 확립으로 생태평등 사회로의 전환
06. [산업지원·건설교통·재정·경제·복지]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07. [정치·행정·사법]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08. [보건의료·환경·재정·경제·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09. [교육·문화·인적자원·스포츠]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10. [국방·통일·외교통상]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경제5단체, 차기정부 100대 정책과제 공동 제안 [바로가기](#)

경제 5단체 공동제언집 4대 분야별 주요 정책 제안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I. 성장을 촉진할 동력	II. 새로운 산업의 이식
① AI역량 강화 3+3 이니셔티브, AIDC 구축 지원 ② 통합솔루션 '메가샌드박스' 추진 ③ 네거티브 전환을 통한 규제시스템 혁신 ④ 전력시장 개편, 국가에너지위원회 설립 ⑤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를 통한 기업가정신 제고	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 항공우주산업 육성 ②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③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④ 미래형 친환경 선박 지원 확대 ⑤ 성장사다리 구축 위한 중견기업 육성정책 강화
III. 경제영토 확대	IV.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조치 대응 ② 시장개척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 위한 FTA 강화 ③ 국가전략산업의 공급망 리스크 분산 추진 ④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및 해외인증 지원 강화 ⑤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진출전략 구체화	① 퇴직후 재고용을 통한 고령자 고용연장 ② 환경변화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 ③ 노사관계 선진화 ④ 최저임금 제도 개편 ⑤ 미래산업 육성 위한 투자지주회사(테마섹) 설립

① 본회의 의결 법안 (5월 1일)

법률안	주요 내용
본회의 의결 [221028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주개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력 등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이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함 -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본회의 의결 [221028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에 적합한 투자기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도입 - 리츠 투자가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리츠 제도를 도입 - 리츠의 공모의무와 주식분산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확대 - 리츠의 실사보고서, 투자보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임원 변경사실 보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보고의무를 완화 - 리츠와 이해관계자 거래를 보고사항에서 공시사항으로 전환하는 등 공시제도를 조정
본회의 의결 [221029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본회의 의결 [221028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LPG 충전사업소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직접 LPG를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
본회의 의결 [220708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 관리자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관리자 부재로 인한 기기의 안전관리 공백 등을 방지 -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직무를 수행하게 하지 아니한 자 및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
본회의 의결 [220157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현행법상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업무의 특성에 관한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적합한 기관·단체·법인이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본회의 의결 [220620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

법률안	주요 내용
본회의 의결 [22055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영업비밀 해외 유출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본회의 의결 [220023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두고,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 규정을 둠 - 인구감소지역에 준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및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② 신규발의 법률안

기업 운영 지원 및 세제 혜택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2210232 / 2025-04-3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신규제정하여 국내기업의 원활한 수출활동을 지원하는 신규 법률 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2210247 / 2025-04-3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자유무역지역법의 목적으로 추가하고, 입주기업체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 물품의 반입·반출 및 관리와 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에 대하여 입주기업체등에 유리한 경우 관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세법 예외 적용의 범위를 확대 -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의 입주자격 예외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기준건축면적률, 출입국관리의 특례를 신설 - 토지 또는 공장등의 취득자에 대한 입주계약체결의무를 부과하고, 기간 내 입주 계약 미체결시 처분의무를 부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의원 등 11인) 2210300 / 2025-05-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회사의 의무투자비율 달성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2210391 / 2025-05-07 / 기획재정위원회	지배주주 본인이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직계비속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는 변칙증여의 대표적인 거래유형으로, 증여의제 대상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외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보완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2210445 / 2025-05-09 / 기획재정위원회	-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20% 가산세율을 삭제하여 상장주식 시세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경우 세금부담을 경감 - 세금의 현금납부가 곤란한 경우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용

법률안	주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2210403 / 2025-05-08 / 기획재정위원회	- 우수선화주 인증 화주기업의 국적선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혜택 요건을 완화 - 세제혜택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고,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국적선사 지출 비용 비율 요건을 40%에서 30%로 완화 - 물동량(TEU) 기준을 추가하고, 전년 대비 국적선사 지출 비용 증가 요건을 삭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2210495 / 2025-05-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삭제 - 주된 업종 유지의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로 완화

통신사 유심 해킹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2210170 / 2025-04-2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침해사고를 금지행위에 포함시켜, 방통위가 원인조사 기간 등에 이용자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이용자의 해지 요청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2210314 / 2025-05-0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용자가 해당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 등 명칭에 제한없이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면제하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2210294 / 2025-05-01 / 정무위원회	일정 건수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불법거래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출 정보의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도록 함

IT 사업자 의무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2210304 / 2025-05-0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정보제공자에게 인공지능기술로 생성한 딥페이크영상 등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 - 해당 표시를 훼손하고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2210312 / 2025-05-0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 -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 관리하도록 함

법률안	주요 내용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2210246 / 2025-04-3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 노인 등 정보기기 활용능력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사람들의 스포츠 관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프로스포츠 경기 입장권 구매 경로 다양화,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2210399 / 2025-05-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절차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등을 고지하도록 의무화 - 대포폰 개통 및 사용 위반 사실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2210458 / 2025-05-09 / 법제사법위원회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민법에 신설하고,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체결과 해제, 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의원 등 13인) 2210504 / 2025-05-1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 앱 마켓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벗어난 외부 결제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외부 결제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 - 인앱결제를 강제한 앱 마켓사업자가 동일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상대로 계약 관련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금지행위를 추가로 위반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의원 등 13인) 2210514 / 2025-05-1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형 CP 등 일정 기준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인공지능 산업 지원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정동영의원 등 20인) 2210451 / 2025-05-0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산업의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의 발굴 및 육성지원 등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신규 법률 제정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9인) 2210511 / 2025-05-1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며, 전력·용수·부지 등 기반 인프라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담은 신규 법률 제정

금융거래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2210157 / 2025-04-28 / 정무위원회	- 현행법상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이익에 반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만 금지되어 있으나, 대주주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추가하여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5인) 2210151 / 2025-04-28 / 정무위원회	현행법상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명칭에 제한이 없어 개인과 동일한 단체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전세사기통장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황운하의원 등 14인) 2210229 / 2025-04-29 / 정무위원회	현행법은 금융거래정보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 종사자가 타인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통계청에서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목적에 맞는 금융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공정거래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2210153 / 2025-04-28 / 정무위원회	-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광고비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입점업체에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 온라인 입점업체 단체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의원 등 11인) 2210309 / 2025-05-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대상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실태조사 개시일 또는 분쟁조정 요청일로부터 3년이 지난 위탁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없도록 제척기간을 도입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2210402 / 2025-05-08 / 정무위원회	휴대폰 또는 고가의 가전 렌탈 등을 악용한 내구제 대출 피해 예방을 위해, 실제 매출금액보다 크게 할부거래를 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할부거래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고 자금을 융통한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2210456 / 2025-05-09 /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할 때 임차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매장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2210534 / 2025-05-16 / 정무위원회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법 위반 정도 및 소비자 피해 수준을 반영하여 조치의 수준도 다양화하여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제고

법률안	주요 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의원 등 12인) 2210531 / 2025-05-15 / 정무위원회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함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양도·면제 등 처분을 금지함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의원 등 11인) 2210264 / 2025-04-3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행법상 의무혼합량 산정 시 해당연도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수요 변동성으로 인해 의무혼합량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바이오디젤 원료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의무혼합을 준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 - 이에 의무혼합량 부족분을 차기연도로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2210305 / 2025-05-01 / 환경노동위원회	-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금지를 고지한 경우에는 고객이 실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해도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함 - 사업자가 무인판매 키오스크 자막이나 방송 등으로 1회용품 사용금지를 고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2210433 / 2025-05-09 / 기획재정위원회	-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국내 공급망 구축 및 수출 산업화, 차세대 소형원전 글로벌 파운드리 구축 - 수출 육성에 필요한 투자 및 R&D 세액공제 혜택 등의 정책 지원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2210540 / 2025-05-1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전기자동차등배터리 또는 기타 에너지저장장치배터리로서 그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사용후 배터리'로 정의 - 전기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소유한 자는 사용후 배터리를 해당 제품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기 전에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규정 - 사용후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 배터리 공급망 전 과정에서 재생원료의 생산, 재생원료 사용여부 및 함유율 등을 검증·인증할 수 있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제조 또는 수입 배터리의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를 규정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의결 및 예고

[시행] 불합리한 하도급 유보금 약정, 「부당특약 고시」 및 「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 2025-05-01

대상 법령	부당특약 고시/부당특약 심사지침
시행일자	2025-05-01
주요 내용	•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 위반의 부당 특약 유형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 • 판단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하여 ▲수급사업자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지 여부가 포함됨 •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입법예고]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 -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 2025-04-29

대상 법령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예고 기간	2025-04-29 ~ 2025-06-09
주요 내용	• 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하여, 후순위채 중도상환 및 인허가 요건상의 K-ICS 비율 기준을 현재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 •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요건에서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하여, 보험종목별로 일정 손해율을 초과할 경우 준비금을 환입하여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업무 범위를 생명보험 상품으로 확대하고, 보험회사 자회사가 장기임대 주택 임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입법예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 2025-04-30

대상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고 기간	2025-05-01 ~ 2025-06-10
주요 내용	-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하여,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를 법제화 -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안계정으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

[입법예고]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 일부개정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 2025-05-15

대상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예고 기간	2025-05-16 ~ 2025-06-25
주요 내용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도 함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정부/공공기관 정책 자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를 끝까지 개선 [바로가기](#)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 / 2025-04-30

-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의 대외 공개 방안에 따라 4월 30일부터 관리과제 174건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산업별로는 의료기기 79건, 제약 72건, 기타·화장품 23건이며,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74건 중 68건을 우선 공개하고 나머지 106건은 5월 중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기업 성장사다리 축진을 위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확대 개편안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부 / 2025-05-01

- 정부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하고, 지난 10년간의 물가상승과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에 따른 생산원가 급증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조정합니다. 중기업 범위기준은 현행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소기업 범위기준은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확대 개편하고, 업종별로는 중기업 16개, 소기업 12개 업종의 매출상한이 조정됩니다.
- 개정된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5월)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공공기관 연구보고서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공개 논의와 입법 과제 - 특정화풍의 이미지생성 사안을 중심으로 [바로가기](#)

국회입법조사처 / 2025-05-07

- 본 리포트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생성형 AI가 특정 화풍의 이미지 생성 기능과 관련하여 학습데이터 공개 논의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EU의 AI 규제 동향과 미국의 저작권 관련 법제를 함께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입법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바로가기](#)

국회입법조사처 / 2025-05-07

- 본 리포트는 4월 SK텔레콤의 가입자 정보가 담긴 홈 가입자 서버(HSS)가 해킹되어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사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분석과 함께 입법적 과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 강화와 조사 권한 확대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연예인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신탁제도 도입 논의와 향후과제 [바로가기](#)

국회입법조사처 / 2025-05-09

- 현행 미성년 연예인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미성년 연예인과 계약 체결 시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인권을 보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미성년 연예인의 수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거나 가족이나 소속사에 의해 의의로 사용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여,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서는 신탁제도의 도입, 위반 시 제재, 간접·보고 체계, 표준계약서 제정 등 제도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요 세미나 / 공청회 / 간담회

주제	주최	일시 및 장소
콘텐츠 플랫폼 국가경제의 새로운 엔진: 산업 정책 제안	민병덕 의원실 외	5.19. (월) 14:0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2025 마이스(MICE) 산업 국회 토론회 및 정책전달식	김윤덕 의원실	5.21. (수) 14:00 국회도서관 강당

● 입법지원팀 ●

기업의 규제환경이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규제 및 입법에 대한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보다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율촌의 입법지원팀은 이러한 기업의 규제 및 입법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 및 행정규칙, 지자체의 조례, 관계부처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에 존재하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해석과 제개정, 사안별 적용 여부 분석과 함께 개별 부처 또는 유권해석 기관 응대를 통한 규제 대응 방안, 국회 국정감사등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제안해 드립니다.

또한 상시적인 입법·정책·규제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객별 산업별 동향을 파악하여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생성되지 않도록 전문 입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촌의 입법지원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의 고위 관료 출신 변호사와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규제 및 입법 대응 전문팀으로, 풍부한 네트워크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별 최적의 대응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변호사



이강민 변호사



박지웅 변호사



장재형 세무사



구기성 고문



김동석 수석 전문위원



최준영 수석 전문위원



윤여훈 전문위원